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국세청, 매출감소동해산불 110만명...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국세청이 코로나 방역으로 매출이 감소한 109만 사업자와 동해산불 피해지역 1만 사업자에 대해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 외의 법인 등 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기 예정신고 때보다 4만명 늘어났다.

이전 6개월치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1억50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예정신고 대상은 아니며, 고지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예정고지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 납부하지 않고 7월 1기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이라도 본인 희망으로 내길 원하는 경우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예정고지 제외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코로나 19 등 사업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신청을 통해 납부연장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사업자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59종의 맞춤형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기 환급대상 및 모범납세기업이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신속한 심사를 통해 이달 29일까지 지급한다. 법정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 것이다.

홈택스, 국세청 누리집, 유튜브, 틱톡을 통해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1~2분 토막 영상으로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검증을 통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부당한 환급신청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 완화할 것"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6일 김대지 국세청장은 6일 성남시 분당에 소재한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해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과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세정 지원 방향을 논의하면서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중소기업 대상 유동성 지원과 세무 검증 배제 등 현행 지원 방안을 소개하는 한편,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추가 세정 지원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축소 및 유예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 방안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 인하... 영업용 화물차·버스 등 보조금 지원

정부가 내달부터 3개월간 유류세 30%를 인하하고, 영업용 화물차와 버스 등에 대해서는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을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고유가 부담완화 3종 세트는 △유류세 인하폭 30% 확대, △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3개월 지급, △차량용 부탄(LPG) 판매부과금 30% 감면 등이다.

정부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물가 안정을 위해 4월 말까지 약 6개월 간 유류세를 20% 인하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로 인해 20%에서 10%포인트 추가로 인하폭이 확대되는 것이다.

유가연동 보조금은 경유 시장가격에서 기준가격(ℓ당 1850원)을 뺀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구조다. 기준가격보다 경유가격이 높아질 경우 차액의 절반을 지원해준다.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화물선 운전자 등이 대상이고, 최대 지원한도는 ℓ당 18321원으로 설정했다.

서민생계 지원을 위해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차량용 부탄(LPG)에 대한 판매 부과금도 3개월간 30% 감면한다. 이로써 L당 12원이 감면된다.